

# “이웃간 다툼 사라지고 주차 스트레스서 해방 됐어요”

광주 최초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 6개월

북구 중흥2동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에 225면 만들어  
일정요금 받고 거주자 우선 주차  
형평성 논란·보행로 축소 부작용도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들 사이 분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71만대에 달한다. 광주 인구 2명당 한 명 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차량이 많아지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는 전쟁이 됐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주택가나 빌라, 원룸단지 등에서는 매일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광주 자치구 중 북구에서 처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돼 6개월이 지났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정 지역 내에서 주차 구획을 그려 각 주차면마다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낸 거주민들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인근 거주자가 1순위이지만, 주차면이 남으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배정받을 수 있다.

월간 이용 금액은 거주자인 경우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는 1만원, 야간(오후 7시~다음날

전 8시)에는 5000원이다. 1만5000원이면 종일 주차도 가능하다. 비거주자가 주차를 신청하면 주간 2만5000원, 야간 1만원으로 더 비싸다.

특히 이 제도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자신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를 주차앱(파크 프렌즈)에 등록하면, 주차 등록 하지 않은 사람도 유료로 해당 주차면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행 6개월만에 광주시 북구 중흥2동 단독주택, 상가, 원룸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225개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에는 누구나 어디에든 주차할 수 있어 매일 아침 '차 빼라'는 고성이나 들렸다면, 이제는 돈을 내고 당당하게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40년동안 중흥2동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정명택(73)씨는 "집 대문 바로 앞에 주차해놓고,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전세냈냐며 되려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아 주차문제로 스트레스가 컸다"며 "이제는 돈을 내고 당당히 주차할 권리가 생겨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도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박재범(60)씨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내 집 앞에 주차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며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해 많은 주민들이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아침에 서로 소리지르며 싸우는 광경도 사라지고, 말 그대로 동네가 평온해졌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타 자치구 및 용봉동, 두암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택가 골목길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9일 자동차들이 주차돼있다.

다만 시행 6개월동안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유 사용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유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어떤 사람은 '야간'에만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뒤, '주간'에는 등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9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중흥2동을 찾아가 보니

앱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지만,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많았다. 또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주차금지 팻말과 물통이 놓여져있는 곳도 있었다.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층이다보니 휴대전화상의 앱을 활용하는 법을 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차난 해소 등에는 분명 기여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용 주차장 조성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가 크게 줄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홍보와 단속을 늘려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철희 기자 strong@

## 청보호 인양 마무리...선체 수색 남은 실종자 4명 못찾아

목포 조선소로 예인

홍도 해역까지 수색 범위 확대

전북 원인 규명 조사도 본격화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어선 '청보호'가 사고 7년만에 인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본격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청보호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밤 8시까지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앞바다에서 목포 지역 조선소로 예인됐다.

앞서 청보호는 사고 해역과 13km 떨어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로 옮겨져 뒤집혔던 선체를 똑바로 세우는 원상 복구(원복) 작업을 거쳤다.

이후 청보호 선내 기관실, 화물칸 등을 수색했으나 실종자 4명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배에서 유실돼 떠내려갔을 수 있다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9일 현재 사고 지점으로부터 동·서 61km, 남·북 72

km 반경을 육안 관찰 방식으로 수색 중이다.

또 해양조사원의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 실종자들이 신안군 홍도 쪽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홍도 바깥 해역까지 수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구조당국은 청보호가 목포 조선소에 도착하는대로 선내 2차 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다.

침수·전복 원인 규명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본원, 서해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한국선급,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8일 밤 11시께 선내 조타실 CCTV 등 카메라 3점, AIS(자동선위차별장치), GPS 플로터, 기관 엔진 모니터 등 사고 전후 상황을 밝혀줄 증거물 6점을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이들 증거물 감식은 증류수를 이용해 세척하는 등 바닷물로 인한 손상 복구 작업을 거친 뒤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주가 걸릴 전망이다.

설계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도면과 실제 선체를 대조해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살피고 검사·정비 과정의 실수나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엔진 냉각용 씨체스트(해수 유입장치) 배관 누수, 양수기 벨트 오작동, 프로펠러 축 부속 결합 불량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필수 항해통신 장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도 살핀다.

수사당국은 현재로선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원복 후 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파손 흔적이나 파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경은 현재까지 선주, 선박 건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데 대한 형사 입건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 원인은 불명이며, 목포 조선소에서 배를 육상에 거치한 상태로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실에 입각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기성용 아버지 항소심서 벌금 5억원으로 감형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아버지 기영욱(66·전 광주FC 단장)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

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들인 기성용이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 부분 사회에 환원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강진군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18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간부급 공무원과 일반인 등 18명에 대해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승욱 전 강진군수 배우자와 선거조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읍·면장급인 서기관 1명과 사무관 9명 등 총

10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8명에 대해서도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추석 무렵부터 2020년 추석 무렵까지 총 6회에 걸쳐 선거주인 2145명 등에 총 6218만원 상당의 과일과 농산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평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